

〈제 726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광주은행 DUAL 카드 출시, 신용카드에 체크카드를 더하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카드인 ‘DUAL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DUAL 카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高(고)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카드이다.

두 가지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DUAL 카드’는 기본형과 잔액 지정형 중 고객이 본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 고객이 지정한 체크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결제할 금액이 그 이용한도보다 크거나 결제계좌 잔액보다 큰 경우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 ▲잔액 지정형 고객이 결제계좌 잔액에 남겨둘 최소 잔액을 지정하고 그 잔액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 된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곡성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9일 전남 곡성군 청에서 곡성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공유와 연계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종 지역 행사 참여와 홍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방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15일(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 (주)지코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격려를 위해 실시됐다.

(주)지코엔지니어링은 브라켓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차 협력업체 사업장으로 '21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사업장 생산공정을 둘러보며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위험성평가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안종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공단에서도 사업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596회 금요조찬포럼〉

· 강사 : 성 진(남양주 성관사 주지)

· 주제 :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를 주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근심걱정을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 하였다.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내가 하는 걱정의 40%는 이미 발생한 걱정이고, 고민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빼고 나면 4%정도만 노력하면 근심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걱정이다.

Chat GPT에게 행복이 뭐냐 물었더니 “행복은 만족, 기쁨의 주관적인 느낌이다. 그것은 종종 행복감, 즐거움, 그리고 성취감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 상태이다. 행복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감정이며, 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행복추구는 자기반성과 마음챙김, 그리고 자신의 삶에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들을 찾고 가꾸려는 의지가 필요한 개인적인 여행이다.” 라고 대답했다. 첫 번째 문단은 학문적이고, 두 번째 문단은 종교인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변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게 아니다라 이야기할 때 가 있는데 이 내용을 Chat GPT가 그대로 표현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를 80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814명 중 아이큐 140이상의 여성, 하드에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엘리트 남성 나머지 절반은 뉴욕 도시 빈민가 시민으로 구성하였다. 해답은 고난이 닳았을 때 보여지는 성숙한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문제를 빠르게 받아 들이고 능동적, 주체적으로 빨리 바뀌야한다. 그래야 직원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편안하게 지낼 적에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생각하면 대비가 있게 되고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근심은 내가 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 근심 걱정을 대하는 자세는 오로지 우리 자신 스스로 찾아야 한다. 어떻게 바뀌서 대응할 수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오류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이고 해결 하려 해야한다.

그동안 봐왔던 근심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극복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경영활동과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강연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경제 동향

◆ 한국은행, 「2023년 1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3.10)

○ 2023년 1월 경상수지는 45.2억달러 적자를 기록

※ 경상수지는 2022년 11월(△2.2억달러) 적자에서 12월(26.8억달러) 흑자 전환하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

※ 경상수지 증감 추이(억달러, 전년동월비, 한국은행)

: △74.2('22.9)→ △62.7(10)→ △68.1(11)→ △36.9(12)→ △67.6('23.1)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 15.4억달러 흑자에서 74.6억달러 적자로 전환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폭 축소,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8.3억 달러에서 △32.7억달러로 적자폭 확대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18.7억달러에서 63.8억달러로 흑자폭 확대

* 배당소득수지(56.6억달러 흑자)는 1980년 통계 집계 이래 43년 만의 최대치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의 법인세 제도 개편으로 인한 국내 기업 해외 법인의 국내 본사 배당액 증가에 기인

- 이전소득수지는 1.6억달러 적자 시현

○ 2023년 1월 금융계정은 6.4억달러 순자산 감소 기록

◆ 통계청, 「2023년 2월 고용동향」 발표 (3.15)

○ 2023년 2월 취업자는 2,77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2천명(1.1%)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 중이나 증가폭은 2022년 6월(84만 1천명) 이후 9개월 연속 감소 중

- (산업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 2천명), 숙박및음식점업(17만 6천명),

Ⅲ. 노동경제동향

정보통신업(4만 3천명) 등의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7만 6천명), 농림어업(△4만 4천명), 운수및창고업(△4만 4천명) 등의 취업자는 감소

※ 도매 및 소매업은 2019년 6월(△4만명)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41만 3천명), 50대(7만 7천명), 30대(2만 4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9만 4천명), 40대(△7만 7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8.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자는 8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6.7%) 감소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7.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전체 체감실업률*은 9.9%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7.9%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1,675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0.6%)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14.9%) 감소

◆ 한국은행, 「2023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3.14)

○ 2023년 2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2.7% 하락)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247.25(1월) ⇨ 1,270.74(2월) [전월대비 1.9% 상승]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2.0% 하락(전년동월대비 1.9% 하락)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렸으나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2.7% 하락)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 2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2.1% 상승(전년동월대비 0.5% 하락)

* 두바이유가(월평균, 달러/bbl) : 80.42(1월) ⇨ 82.11(2월) [전월대비 2.1% 상승]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2% 상승(전년동월대비 1.4% 하락)
- (중간재)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2.3% 상승(전년동월대비 1.3% 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1.4% 상승했고, 소비재는 전월대비 1.7% 상승(자본재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소비재 1.9% 상승)

2. 노사 동향

◆ 고용부는「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

○ 대통령은 3. 14 고용부가 지난 3. 6 입법예고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6 ~ 2023. 4. 17

- 이에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

○ 경총은 3. 15「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주요기업 임원들은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선택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또한, 주요기업 임원들은 ‘노동계가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

○ 한국노총은 3. 15 더불어민주당과의「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의

※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김영진 환노위 간사, 이수진 원내 대변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5대 노동개혁 저지* 및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실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 결의문 채택

* (5대 노동개혁 저지) ①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저지, ②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개악 저지, ③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④ 연금개혁 반대, 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Ⅲ. 노동경제동향

**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② 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③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실질임금 확보, ④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고용승계 보장법 쟁취, ⑤ 법정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등

- 또한, 한국노총은 3. 16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개편안의 폐기 요구
-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 15 고용부가 개최한「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간담회」에서 기습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

◆ 정부와 여당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 정부와 여당은 3. 13「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개최
 - 여당은 이 날 협의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횡령·배임 발생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이 날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원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건’ 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발언
- 한편, 고용부는 3. 15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위반한 노조들을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점검대상 319개 중 26.9%(86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의 제출비율(37.1%)이 가장 낮음.

Ⅲ. 노동경제동향

[참고]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제출 현황(고용부, 3. 13 기준)

구분	점검 대상	미제출			제출 ³⁾	기타 ⁴⁾	제출비율 ⁵⁾
		소계	전체 미제출 ¹⁾	일부 미제출 ²⁾			
한국노총	178	32	3	29	141	5	81.5
민주노총	64	39	2	37	23	2	37.1
미가맹 등	92	15	3	12	69	8	82.1
합계	334	86	8	78	233	15	73.1

1)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 혹은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와 내지 전부를 제출한 경우

4) 해산신고 등으로 점검 대상노조가 부존재하는 경우

5) 유효한 점검대상 중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비율

-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 4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

- 특히 고용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

3. 법제 동향

◆ 김학용 의원(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9)

- (발의 이유)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김용민 의원(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9)

- (발의 이유) 현행법(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은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경우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산재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경우도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

◆ 서동용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0)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파면, 해임, 해고 등 구체적으로 규정

◆ 한병도 의원(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3)

- (발의 이유) 현행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은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Ⅲ. 노동경제동향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적용기한(2023년 말까지)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

◆ 이주환 의원(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3)

- (발의 이유) 현행법(채용절차법 제8조)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등 채용과정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구직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채용단계별 심사 결과도 고지하도록 규정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구인자가 채용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도록 규정

◆ 최강욱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3.13)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난임치료 시술 주기별로 1일 ~ 4일 이내 휴가 사용을 허용
② ‘난임치료휴직’ 규정을 신설

◆ 이상헌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3)

- (발의 이유) 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허용 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 제기

Ⅲ. 노동경제동향

②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을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

◆ 이탄희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4)

○ (발의 이유) 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허용 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 제기

②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사업주에게 ‘청구’ 하던 기존 방식에서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

◆ 윤재갑 의원(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5)

○ (발의 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복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 인원수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주요 내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 인원수에 1,500만원(중견기업은 1,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Ⅲ. 노동경제동향

◆ 신동근 의원(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5)

- (발의 이유) 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범위 지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
②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②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
③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일괄 상향
④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

[신동근 의원안과 유사 취지의 법안]

- ▶ 김성원 의원(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4)
- ▶ 정태호 의원(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5)
- ▶ 윤영석 의원(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5)
- ▶ 홍영표 의원(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5)
- ▶ 양정숙 의원(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15)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국가전략기술 범위	세액공제율	일몰기한
기존	·시행령에 위임	·대 기업 : 8% ·중견기업 : 8% ·중소기업 : 16%	·2024년 말
김성원 의원안	·기존 내용 유지	·대 기업 : 20% ·중견기업 : 25% ·중소기업 : 30%	·2030년 말
신동근 의원안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및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포함 ·법률로 상향 규정	·대 기업 : 15% ·중견기업 : 15% ·중소기업 : 25%	·2025년 말

Ⅲ. 노동경제동향

구분	국가전략기술 범위	세액공제율	일몰기한
정태호 의원안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 포함 ·법률로 상향 규정	·대 기 업 : 15% ·중견기업 : 20% ·중소기업 : 25%	·2024년 말
윤영석 의원안	·바이오·화합물 의약 산업, 차세대 원자력 산업 분야 기술 포함 ·법률로 상향 규정	·대 기 업 : 15% ·중견기업 : 25% ·중소기업 : 25%	·2024년 말
홍영표 의원안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항 신설	·대 기 업 : 10% ·중견기업 : 10% ·중소기업 : 20%	·2024년 말
양경숙 의원안	·수소 등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 포함 ·법률로 상향 규정	·대 기 업 : 10% ·중견기업 : 10% ·중소기업 : 25%	·2025년 말